

2024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공동주최 국회시민정치포럼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공동주관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단법인 시민



2024 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 필요성

-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국가로 분류하는 등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가 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활동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과 소통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회 시민정치포럼을 통해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정치포럼의 대외적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이 미치는 현상을 토대로 강한 시민사회가 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목적

-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국회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기틀 마련
- 향후 시민주도형의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입법 전략 모색

□ 개요

- 행사명 : 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10:00~12:00(2시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자원조직네트워크,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 공동주관 : 국회시민정치포럼, 사단법인 시민

□ 세부내용

시 간	구 분	프로그램	비 고
[1부] 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식 진행 : 송재봉(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의원)			
10:00-10:20 (20')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인사말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전,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 -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 송성영 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시민정치포럼 참여의원 인사 	
10:20-10:25 (5')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시민정치포럼-시민사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 - 국회시민정치포럼 / 이용선·차규근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 류홍번 운영위원장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 -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 윤종화 이사장 	
10:25-10:30 (5')	기념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2부] 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 진행 : 채연하(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10:30-11:00 (30')	발제 1	<p>민주주의 퇴행이 가져 온 한국 사회의 위기</p> <p>■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p>	
11:00-11:30 (30')	발제 2	<p>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p> <p>■ 이희숙(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사단법인 시민 이사)</p>	
11:30-12:00 (20')	종합토론	<p>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p> <p>■ 참석자 전원</p>	
12:00-13:00	오찬	점심식사	

목 차

1부 출범식

개 회 사	9
· 이용선 국회의원/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개 회 사	11
· 차규근 국회의원/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환 영 사	13
· 송재봉 국회의원/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의원	
인 사 말	15
· 천준호 국회의원/전)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축 사	17
· 우원식 국회의장	
축 사	19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 사	21
· 임정근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축 사	23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시민 정치포럼

주요활동계획 및 정관	27
회원명단	31

2부 토론회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	37
· [발 제]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65
· [발 제] 이희숙 변호사/사단법인 시민 이사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79
· [토 론] 참가자 전원	

1부 출범식

개 회 사

- 이용선 국회의원/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 차규근 국회의원/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환 영 사

- 송재봉 국회의원/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의원

인 사 말

- 천준호 국회의원/전)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축 사

- 우원식 국회의장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정근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개 회 사



이 용 선
국회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제22대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오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제19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지금 제22대 국회까지 12년 넘게 이어져 온 연구단체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이에 더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공동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전 열린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벌써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단법인 ‘시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서울대 임현진 명예교수님, 사단법인 시민 이희숙 이사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협력 방안을 경청해서 국회 시민정치포럼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



차 규 근
국회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감히 국회시민정치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출범식에 참석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용선 대표 의원님과 송재봉 연구책임 의원님을 비롯한 참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 퇴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담은 민생법안조차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국민께서는 ‘거부권을 거부한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자들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는 전두환을 임명한 꼴입니다. 이러다가 독립기념관은 패전기념관으로, 독립군은 무장 테러단체로 고칠까 심히 우려됩니다.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

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시민정치포럼 출범식과 토론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저 또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사단법인 시민 관계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송재봉
국회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시민정치포럼 책임연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 국회의원 송재봉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회시민정치포럼 이용선, 차규근 공동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서왕진, 염태영, 이광희, 이용우, 이학영,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출범을 함께 축하해주신 시민사회 대표님과 활동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민단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면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서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는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

여 민주주의의 근본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시민사회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공익활동가 지원법 등의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천 준 호
국회의원
전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제22대 국회 「시민정치포럼」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1대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제22대 국회「시민정치포럼」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용선·차규근 공동대표님과 송재봉 연구책임의원님을 비롯해 포럼에 함께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사단법인 시민 임정근 이사장님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래 우리는 반복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시민들의 뜻을 담아 통과시킨 법안에 16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무기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를 탄압해왔습니다. 정부는 온갖 구실로 예산을 삭감하며 시민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산업화와 정보화로 이어져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킬 힘 또한 시민에게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시민의 뜻을 제도권에 전달하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시민정치포럼은 국회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연결고리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정치포럼의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2대 국회 「시민정치포럼」출범식을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 사



우 원 식
국회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범식을 준비 해주신 이용선·차규근 공동대표님, 송재봉 연구책임의원님을 비롯해 함께 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오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사단법인 시민 임정근 이사장님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영성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시민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때마다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 사회 · 복지 · 환경 · 인권 · 에너지 · 동물 등 시민운동의 영역은 더욱 세분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국회와 시민사회간 든든한 다리가 되어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를 축하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박 찬 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사회, 학계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제22대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포럼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이용선·차규근 공동대표님, 송재봉 연구책임의원님, 사단법인 시민의 임정근 이사장님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평범한 생활인이던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실천하는 시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가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고, 정부는 예산이라는 무기로 입맛에 맞

는 단체들만 챙기며 시민사회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위기도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의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기후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들과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비상한 대안과 추진력이 간절합니다.

냉혹한 시기일수록 시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제22대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정치와 시민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도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 사



임 정 근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경희사이버대학교 명예교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정근입니다.

“2024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 시민정치포럼의 이용선, 차규근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25분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동주최를 해 주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의 토론회는 기초발제를 해 주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이희숙 변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 참여자분들의 지혜와 노고에 힘입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탄’이라는 낯고 무서운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흙 수렁과 숯불 구덩이”에 빠진 듯 모든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남짓한 기간에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왜곡을 넘어 파괴를 일삼고, 민생경제의 파탄, 의료 대란, 노동 현장과 언론에 대한 억압은 물

론, 코앞에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절박하게 필요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망을 모두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낮의 찌는 더위’와 ‘얼어붙은 저 별판’의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무시당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존엄성과 권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한 사람의 힘”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와 국회가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 국민, 국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독선과 퇴행의 정치를 바로 잡고 새로운 민주 시민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4년, 이 엄혹한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국회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절박한 기대입니다. 오늘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단체들이 맺는 협약은 바로 이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모임을 시작으로 다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강한 발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사회와 국회의 아름다운 동반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송 성 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한국사회는 시민사회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전략적 접근이 부재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나 자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영역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운동단체(애드보커시) 정도로 이해하는 편향적 시각이 존재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갈등 해결 및 통합, 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인권 및 시민권 보장, 민주주의적 질서유지 및 강화, 시민교육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국사회의 균형적, 포용적 발전과 성장은 전통적으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삼각축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사회봉사 영역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정책화되고 시민사회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서며 그나마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며 시민사회를 적으로 몰아세우고

탄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 살 깎아 먹는 것처럼 사회의 한 축을 무너트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병든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가 가속화되는 엄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늦은 감이 없지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전제로 2024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부가 역할을 안 하고 퇴행시키고 있는 현실을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의 상식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와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정치포럼

주요활동계획 및
회원소개



국회시민정치포럼

□ 목적

-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정치 활성화'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여, 정당 · 시민사회 · 국회가 협력해 시민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연구

□ 주요활동계획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전략 모색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시민사회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연구

시민사회 각 분야별 이슈 분석 및 대응 방향 모색

- 국가 예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견제 공동 모색
- 국회와 시민사회 상시적 협력체계 방안 마련

□ 회원(25명)

• 정회원 : 총 10명

- 대표의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 책임연구의원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 준회원 : 총 15명

-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민병덕, 박주민, 박지혜, 박홍근, 서미화, 염태영, 이용우, 이학영, 진선미, 차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 시민정치포럼 정관

제1장 총 강

제1조 (명칭)

본 포럼은 “국회 시민정치포럼”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정치 활성화’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정당·시민사회·국회가 협력해 시민주도형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시민정치의 가치와 비전에 관한 연구
- ② 시민들의 정책적 욕구를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 ③ 노동, 복지, 경제, 환경 등 분야별 정책 입법 활동
- ④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⑤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포럼의 사무소는 국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 (국회등록)

본 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국회에 등록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한다.

- ① 정회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한 자.
- ② 준회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준회원으로 입회한 자.
- ③ 특별회원은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나 연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 ① 대표 약간 명
- ② 고문 약간 명

- ③ 운영위원 약간 명
- ④ 연구책임의원 약간 명
- ⑤ 감사위원 약간 명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① 정관의 제정과 개정
- ②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및 예산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④ 본 연구회의 해산

2. 본 연구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시에 또는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제10조 (자문위원, 전문위원)

- ① 대표는 본 연구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각계의 대표적 인사로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인사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은 국회, 관료,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 (재정)

본 포럼은 국회 규정에 의거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예산, 회비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 (일반관례의 운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창립일로부터 발효한다.

국회시민정치포럼 회원

구 분	사 진	성 명	교섭단체	지역구	상임위
대표 (2)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임 연구 의원 (1)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회원 (7)		김 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구분	사진	성명	교섭단체	지역구	상임위
정회원 (7)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정무위원회
준회원 (15)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구갑	정무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보건복지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 분	사 진	성 명	교섭단체	지역구	상임위
준회원 (1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환경노동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교육위원회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외교통일위원회

2부
토론회

발 제 1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발 제 2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이희숙 변호사 / 사단법인 시민 이사

토 론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참가자 전원



발 제 1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시민사회의 과제
- 정치개혁을 위하여 -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목차

1. 한국은 무너지고 있다
 2. 민주주의의 퇴행
 3. 대안을 찾아: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
 4. 시민사회의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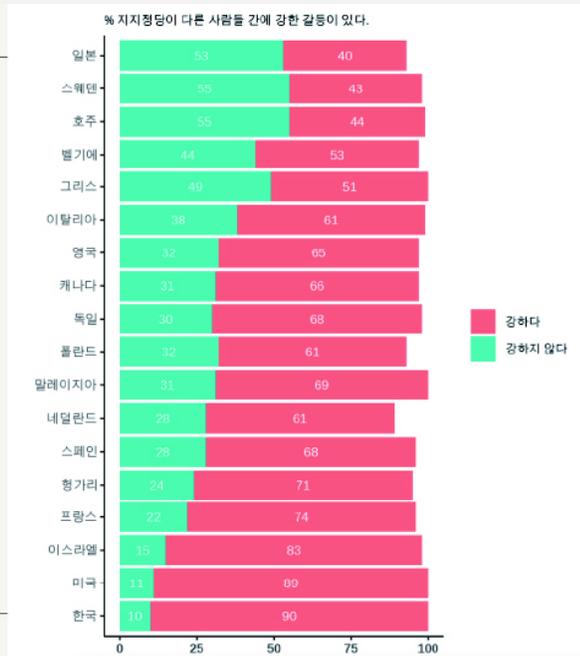
1. 한국은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 무너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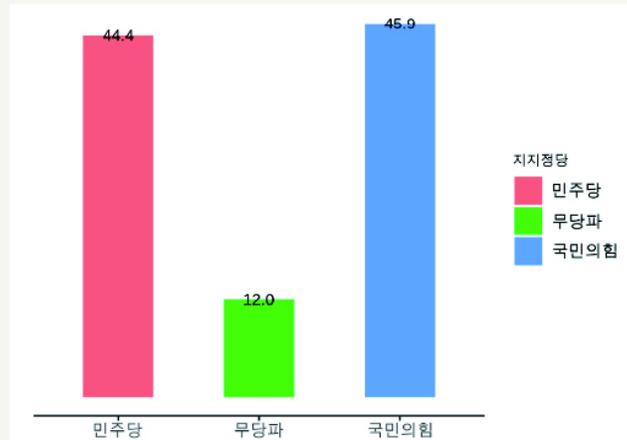
- 한국 자멸론: 그간의 압축발전이 '피크 코리아(Peak Korea)'를 거쳐 압축해체로
-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자유주의 체제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체제 사이의 신냉전 아래 얼어 붙은 남북관계: 공존에서 대결. 하나의 민족->적대국
- 현실이 된 미래위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제일 빠른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활동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회갈등과 진영대립 심화
 - **절벽시나리오**: 인구절벽->지역절벽->성장절벽->재정절벽->국가절벽
 - 진영대립: **정치적 양극화** ← 경제적 불평등+사회적 이분화+팬덤정치
- "새우에서 고래(From Shrimp to Whale)가 된 한국: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
- 과거와의 대화를 넘어 미래와의 대면이라는 역사의식이 필요: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위해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아래 적어도 한 세기를 미래창발적으로 대비해야 함
 - 제도와 의식의 변화. 시민사회가 견인해야 한다!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갈등

출처: PEW Research Center,
Spring 2022 Global Attitude Survey



지지정당별 정서적 양극화



출처: SKK, 2023

Prosecracy

- Churchill 의 역설 화법: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
- populocracy (포퓰리즘정치), kakistocracy (극악정치), kreptocracy (도둑정치), plutocracy (금권정치), algocracy (알고리즘정치), judiciacracy(사법정치), prosecracy (검찰정치), mobocracy (중우정치), dinocracy (소음정치) ...
- Aristoteles: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는 부식된다
- 민주주의: 직접과 간접→대의민주주의: 만민평등과 다수 지배 사이의 모순
- **Prosecracy**: 모든 정치가 위로부터의 검찰 권력에 의해 지배. 특정 정치 사안을 법치란 이름 아래 검찰력을 동원하여 사법적 잣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통치행위. 법치에 근거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법치가 법률을 수단으로 편용하는 지배로 뒤바뀌고 있음. 이렇듯 지나친 검찰 수사와 기소에 의한 정치→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 개혁 지지부진: 교육, 연금, 노동, 의료+저출생. 대화와 소통X, 설득과 공감X 사회적 대화 필요
- 인사 파행, 일본 식민지 시대 면죄부, 채상병 특검, 공영방송 정상화, 건국절 논란, 뉴 라이트 배치...

자유주의-민주주의-공화주의

- 개원부터 불구인 제22대 국회: 한 쪽은 입법화로 밀어붙이고, 다른 쪽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
 - 선진국 대열에서 좌초하지 않으려면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함
입법독주 <→> 거부권행사. <> 이 45개, 노 4개 이 1개, 박 2, 윤 14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없음)
 - 여야가 협애한 정파 중심의 권력정치를 넘어 권력구조, 정당제도, 선거구제 등의 정치개혁을 위해 나서야 함
 - **자유주의-민주주의-공화주의**: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로 출발/사적 이익. 공화주의: 공적 이익으로부터 출발/공공선
 -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발흥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가 개화함
→ **공화주의로 가야 함.**
 - 'Real Utopia': 1조직과 제도 사이의 변혁, 2 자본과 노동의 공생적 변화, 3 자본주의로부터 탈피
시민사회의 역능화("social" in socialism): 시민참여
-

왜 시민사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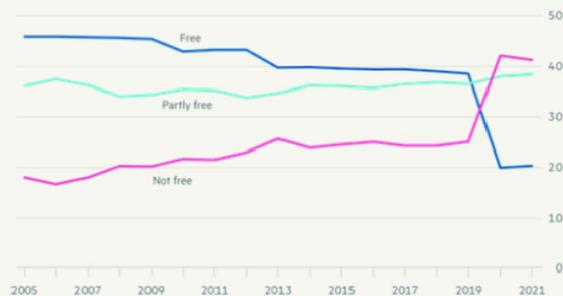
- 시민사회: 시민을 능동적 행위자로 만들어주는 **사회운동단체**, 가치와 이해의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마련해주는 **공론장**, 신뢰와 관계에 기반하여 협조와 조정을 해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
 - 시민사회 내부에서 상호관계를 맺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특권화하지 않고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이익을 고려하는 상호 협력과 부조를 모색
→ 이러한 연대의 원리가 자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국가의 지배와 시장의 경쟁 논리에 의해 압도당할 때 시민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전화될 가능성
 - 대의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권력의 집중화와 관료제의 심화 경향은 상향적 의사결정과정을 약화시킴
→ 선거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사회경제적 시민권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추가하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증대한 과제(김호기 2000)
- ⇒ 시민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구축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심화가 이루어지는 핵심 영역, **시민사회 없이 자본주의/사회주의 가능, 그러나 시민사회 없이 민주주의 불가능**
-

2. 민주주의의 퇴행

전 세계적 민주주의의 쇠퇴

- 오늘날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퇴보(backsliding, recession, retreat)하고 있다
- Freedom House(2022):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가의 숫자는 줄어들고 반대로 권위주의 국가들이 늘어남

<그림 1> 민주주의의 역행 (세계 인구의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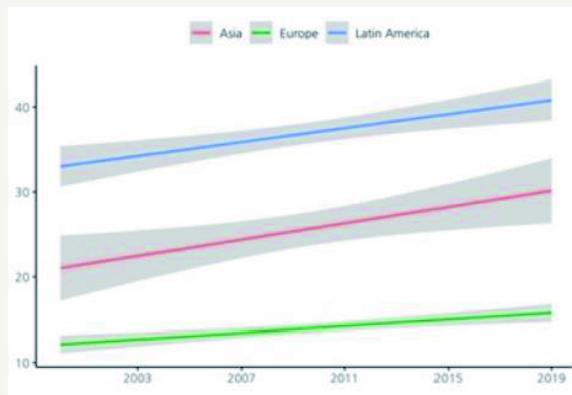


전 세계적 민주주의의 쇠퇴

- 자유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100여 가지가 넘으며 나라마다 민주주의도 다름
 - 일단의 학자들은 지난 세기 민주주의는 '위기'(crisis)에서 '후퇴'(retreat)를 거쳐 '퇴화'(degeneration)하고 있다고 주장함 (Calhou, Gaonkar and Taylor 2022)
 -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행은 흥미롭게도 지난날처럼 쿠데타, 반란, 대중봉기 등에 의하기보다 합법적 선거—때로 부정선거나 투표조작을 포함—를 통해 등장한 집권자가 스텔스적으로 민주적 규범과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특징을 보임 (Levitski and Ziblatt 2019)
 - 개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의 전제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음
 - 막강한 권력을 지니는 지도자 - 배타적 민족주의의 표방 아래 국민을 적과 동지로 양분화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성향을 나타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 필리핀의 두테르테, 일본의 아베, 미국의 트럼프, 베니주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브라질의 보르사리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

전 세계적 민주주의의 쇠퇴

<그림 4>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포퓰리즘 정당, 2000-2019



Grzymala-Busse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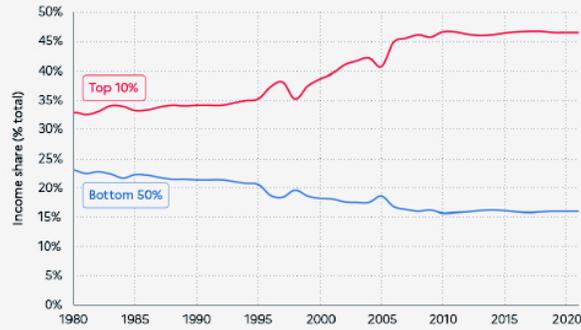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 한국의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정권을 오가면서 앞치락 뒤치락: 작금 퇴행
 - 미국의 Freedom House(2023)에 의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가 모두 향상되어 '자유'로운(free) 국가에 해당
 - 영국의 Economist는 네 가지 유형의 민주주의를 분류: '완벽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민주주의·권위주의와 혼합형 체제'(hybrid democracy),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 이 중 한국을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
 -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서 한국은 총점 10점 만점에서 8.03점으로 167개국 중 24위를 차지함. 8점대를 간신히 유지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평가
 - V-Democracy Institute(2024):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 유일 "민주화에서 독재화"(28위->50위)
 - 북수정당제에 기반한 공명선거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 민주주의라 할 시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권리(democratic rights)와 정부가 앞장서야 할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잘 구현되고 있지 않음. **집단·계층 간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문화도 취약**
-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 또한 중요: 경제적 양극화→사회적 양극화→정치적 양극화
 - 한국은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생활과 문화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두 개의 국민'이 나타남
 -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2022)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비교가능한 30개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
 -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p 증가한 11.7%를 기록함 → 멕시코의 8.7%p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
 -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2.5%p 늘어난 34.4%를 기록 →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뉴질랜드(4.5%p), 덴마크(3.8%p), 튀르키예(3.3%p)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증가폭
 -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분배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상위 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면서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를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지니계수로 보면 다음과 같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지니계수는 0.331로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분배는 더욱 나빠짐
-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Interpretation: The Top 10% income share is equal to 16% in 2021. Income is measured after the operation of pensions and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and before income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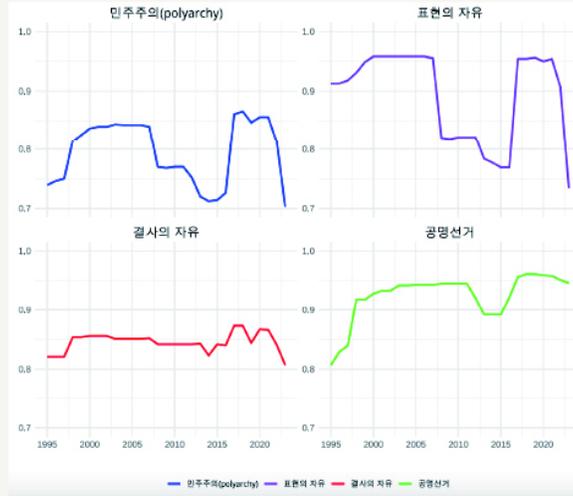
Sources and series: see wir2022.wid.world/methodology.

민주주의의 후퇴?



출처: V-Dem Dataset v13 Coppedge et al. (2024). <https://doi.org/10.23696/mcwt-fr58>

민주주의 지수의 변화, 1995-2023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구상

키철티의 자본주의 유형화

자본주의 유형	정당체계	계급타협의 조직화
조정되지 않은 자유시장경제	양당체제: 경제적-분배적 균열에 따른 분화(미국, 영국)	잔여적 복지국가; 소득조사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다수 자유주의 복지국가
국가적으로 조정된 시장경제 (노동 코포라티즘적)	헤게모니적 사회민주당과 분열된 나머지 정당들; 중도좌파와 보수우파 정당의 부상(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포괄적평등주의적재분배적 복지국가; 높은 탈상품화; 직접적인 공공서비스 사민주의 복지국가
산업부문별로 조정된 시장경제 (라인 자본주의)	삼극 정당체제(자유, 카톨릭, 사민당); 강력한 중도좌파와 보수우파 정당의 출현(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고용-소득연계적 공적이전 프로그램; 중간적 탈상품화; 낮은 공공서비스 보수적 복지국가
기업집단별로 조정된 시장경제	헤게모니적 부르주아정당; 비이데올로기적후견주의적 정당경쟁 체제(한국)	잔여적가부장적 복지국가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자

-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셔츠슈나이더(E. Schattschneider) 교수: 국민은 민주주의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주권자(semisovereign people)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 demos(인민)의 kratos(지배)로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거꾸로 다수의 국민을 지배함. 그러한 대의 민주주의에 식상한 시민은 온라인이나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를 직접 하려 함
 -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
 -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제도가 살아 움직여야 하며, 지방정치를 분권과 자치로 강화해야 함
 - 아래로부터의 대표성과 위로부터의 책임성이 맞물리도록 참여와 숙의 과정이 중요
-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14명의 대통령, 한국은 13명의 대통령, 영국은 18명의 총리, 일본은 33명의 총리를 두었지만, 독일은 불과 8명의 총리만을 가짐 - 아데나워(Adenauer)가 14년, 콜(Kohl)과 메르켈(Merker)이 각기 16년 총리로 재직
 - 독일이 정치 안정에서 돋보이는 이유는? 내각제에 답이 있어 보이나 영국, 일본도 내각제
→ 정치 연합을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 제도
 - 하나는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정치대표체제**, 다른 하나는 이익집단을 통해 시민과 정부를 매개하는 **이익조정체제**
 - 영국, 일본, 미국, 한국 등의 **단순 다수제**(simple majoritarian) 정치는 승자독식과 권력독점이 나타남
 - 독일의 **합의제**(concensus) 정치는 선거 이후 다수파와 소수파가 연정을 구성하여 각료배분과 정책공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노사정 3자 협의에 기초한 코포라티즘이 시민사회의 복잡한 이해조정을 도움
-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자

- 한국 정치의 증원은 좁음. 지지자를 극단으로 가르는 팬덤정치로 인해 좌우가 원심화
 - 우리와 비교하면 독일은 극단적 좌우로 편향되지 않음. 사회적 연대 위에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시도
 - 일찍이 교조적 맑스주의와 결별하였으며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집착하지 않음
 - 중도 좌우 정당의 연합에 의한 실용주의 정치가 사회포용적 복지국가로의 길을 열어줌
 - 합의 정치와 코포라티즘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 의회와 정부를 서로 연결함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문화는 선진국, 경제는 중진국, 정치는 후진국이라 함
 - 'BTS'는 없고 '오징어 게임'만 있는 국회 - 정치꾼(politician)은 많은데 정치가(statesman)가 안 보임
 - 답답한 나머지 옛 '3김'을 호출, 민주화의 전기를 마련한 '87년 체제'를 넘지 못하고 있음
 - 권위주의 시대 1.0은 끝났다. 사회가 분화했고 시민이 주인인 소득 3만불 시대 - '87년 체제'의 2.0으로 어렵다. 이제 **한국 정치 3.0**으로 가야 한다.
-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자

-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단순 다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다수제 정치에서 50% 미만이라도 소수점 +만으로도 승자독식(winner-takes-all)이 일어남
 - 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율은 77.15%로 비교적 높았으나 1위 48.56%와 2위 47.83% 사이의 차이는 불과 0.73%에 지나지 않음
→ 패자가 승복하지 않으며, 22대 총선 이후 거야여소 아래 극단적 대결로 치달음: 입법화<->거부권
 - 국회의원 선거도 단순 다수결주의로 인해 2등보다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됨
 -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양산함. 승자독식아래 대표성과 비례성이 왜곡됨
 - 역대 총선 사표 비율: 17대 50%, 18대 47%, 19대 46%, 20대 50%, 21대 44%, 22대 42%
 - 유권자 유효 투표의 거의 절반 내외가 사표
국민의 절반이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다"고 절망
-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자

역대 총선과 사표비율

	투표수	사표	사표 비율
22대 총선	29,234,129	12,136,757	41.52%
21대 총선	28,741,408	12,567,432	43.73%
20대 총선	24,360,756	12,258,430	50.32%
19대 총선	21,792,851	10,120,550	46.44%
18대 총선	17,212,690	8,105,059	47.09%
17대 총선	21,263,745	10,629,856	49.99%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자

- 한국사회의 분화는 급격함. 지금의 양당 중심 제도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려움
 -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의 비례대표제는 형식적
 -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제와 어울림. 사회분화에 따른 갈등과 균열을 해소하려면 다양한 계급, 집단, 부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당제가 필요
 - 내각제나 분권제를 향한 권력구조의 개혁은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함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기득권으로 인해 소선거구제에 매달려 있음
-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자

- 지금의 소선거구제아래 단순 다수결주의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은 거대 여야 정당의 지역주의에 근거한 엘리트 카르텔을 지속시킴
 - 대통령선거도 결선투표나 선호투표 없는 단순 다수결주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가 과열되고 승자 독식에 따른 권력 독점이 나타남
 -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일찍 가져오고 정부의 효율성과 정책의 지속성도 떨어트림
 - 이왕 대통령제를 하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함
 - 내각제로 가려면 정치인의 식견과 자질 향상, 수용과 협상의 문화의 발달, 직업 관료제의 정착 등이 필수적. 특히 내각제는 정경유착의 심화와 정당 담합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원집정제는 내각제의 경험 없이 실행하기 어려움. 분권제는 내각제 보다 정치의 안정성 낮다. 선거연합은 수시로 바뀌고 동거정부 경우 의회 해산과 총리 지명 거부가 나타남
 -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 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함
-

3. 대안을 찾아: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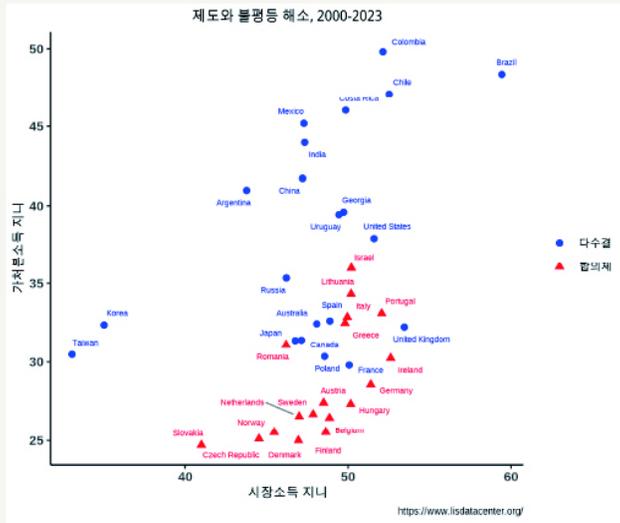
대안을 찾아: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

-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지만 **힘의 집중과 부의 편중**을 넘지 못하고 있음
- 다수제 정치대표체계와 다원주의의 이익조정체계의 한계에 기인함
- 선거의 정치는 유권자의 숫자를 반영하지만, 유권자 각각이 가지는 이해관계의 강도를 대변하지 못함
- 반면 코포라티즘적 이익집단의 정치는 참여자들이 가지는 이해관계의 강도를 반영함
- **숫자를 대표하는 정치대표체계와 이해의 강도를 반영하는 이익조정체계가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대표체계와 시민사회를 포용하는 이익조정체계가 합류해야 함
- 연정(coalition)에서 보듯 정치 연합으로서 합의 정치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산업, 무역, 복지, 노동, 소득, 조세 등 사회경제정책에 의해 뒤받쳐 줌
- 의회에서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현안은 코포라티즘적 이해조정에 의해 정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주주 자본주의를 취하는 나라들보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나옴. 범죄율과 투옥율도 낮고, 이민과 난민에 대해 수용적이고 해외원조도 많음

대안을 찾아: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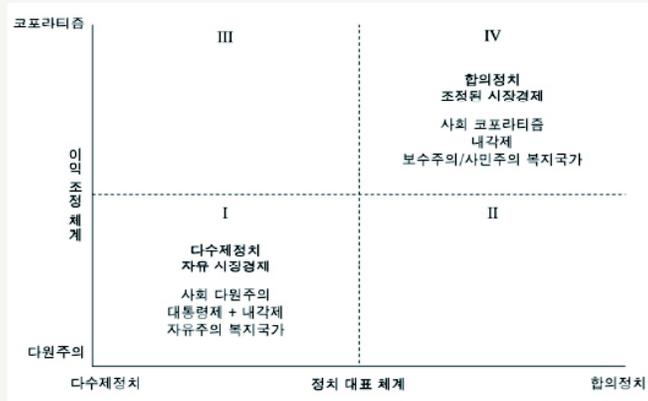
정부형태에 따른 안정성과 대표성

정부형태	선거제도	안정성	대표성
대통령중심제	소선거구제	High	Limited
의회중심제	비례대표제	Variable (depends on coalitions)	High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Often unstable	High
의회중심제	소선거구제	High	Limited



대안을 찾아: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정치대표체계와 이익조정체계의 차이



대안을 찾아: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

- 유럽 독일,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다수제 정치로부터 합의제 정치로 제도적 변화를 거쳐 코포라티즘적 이해 조정에 의해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옴
- 이들은 인종, 종교, 언어, 계급, 지역, 세대, 젠더에 따른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소수를 정치과정에 동참시키는 합의 정치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를 수렴할 수 있는 코포라티즘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시켜 옴: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 특징: 집행권력의 분점,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 강한 양원제, 다당제, 다차원적 정당체제, 비례대표제, 연방주의와 분권화, 성문헌법과 소수파 비토권
- 특히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진영논리에 따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 때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 토론(*discussion*), 협상(*bargaining*), 협의(*concertation*) – 를 중시하는 사회 코포라티즘은 문제의 해결에 유리함

대안을 찾아: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

협의 민주주의의 위상

		사회의 구조	
		동질적	다원적
엘리트 행태	연합적	탈정치적 민주주의	협의 민주주의
	적대적	구심적 민주주의	원심적 민주주의

대안을 찾아: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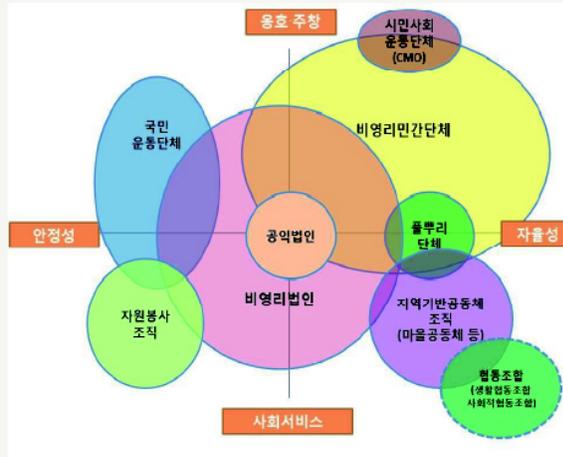
국가-사회 관계에서 본 이익조정 네 가지 유형

	사회다원주의	사회 코포라티즘	국가 코포라티즘	국가 단원주의
정치체제	민주주의 선발국	민주주의 선발국	권위주의 후발국	권위주의 후발국
이익집단구조	자율적, 수평적, 경쟁적	자율적, 수직적, 경쟁적	강제적, 수직적, 비경쟁적	강제적, 수직적, 비경쟁적
대표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브라질	한국, 대만
행동주체	집단	집단과 국가	국가	국가
이익집단활동	정부기구 밖에서 활동, 대의회 및 정당활동 중시	정부기구 밖에서 활동하나 정부기구와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	관제화된 이익집단들 동원	관제화된 이익집단을 통해 억압
계급관계	경쟁적	상호보완적	상호배타적	상호배타적
정부역할	중립자	조절자	통제자	통제자

4. 시민사회의 과제

시민단체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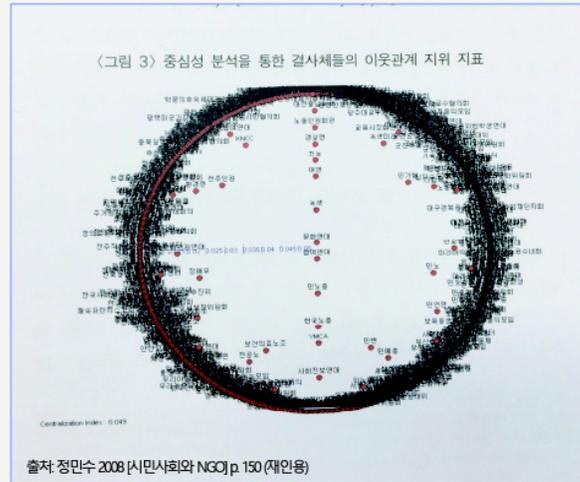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도



출처: 공석기유지연, 2017 36쪽 재인용



2005 한국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이웃관계 지위지표)



제3의 시민사회 형성: MZ세대의 변화

- 한국의 NGO: 10만 개. 이중 많은 단체들 이름만 걸고 비활동. 개인의 정치활동, 세금회피
-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운동단체는 15,000여개, 비영리 사단 재단 형태의 법인 5,000여개
- 뒤늦은 성장, 때 이른 쇠퇴. 질양적으로 위기
- 대부분 재정상태 취약, 회원 증가 멈춤, 활동가의 충원 어려움, 지구적 연대 구축 미약
- 시민의 시대→개인의 시대: 제3의 시민사회 디지털 플랫폼에서 쉽게 연결. 온라인에서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비대면 만남 선호.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 프레임 공유 사람들 끼리 모임. 특수이익 아래 떼쓰기: 가짜뉴스, 허위정보, 댓글조작 등
-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풀뿌리를 강화하면서 특정 이슈 중심의 전문화 필요/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사이의 협력과 연대 필요/중앙과 지방 수준 사이의 역량 격차 여전, 여러 부문운동들 사이의 병행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너지 어려움
- MZ세대="낡기 두렵고, 살아서 뭐하나" → 감성, 개성, 혁신 중시: 활동가의 기회구조 변화 경력관리 부재 (보상 체계 없음), 소셜벤처,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환경정의-정당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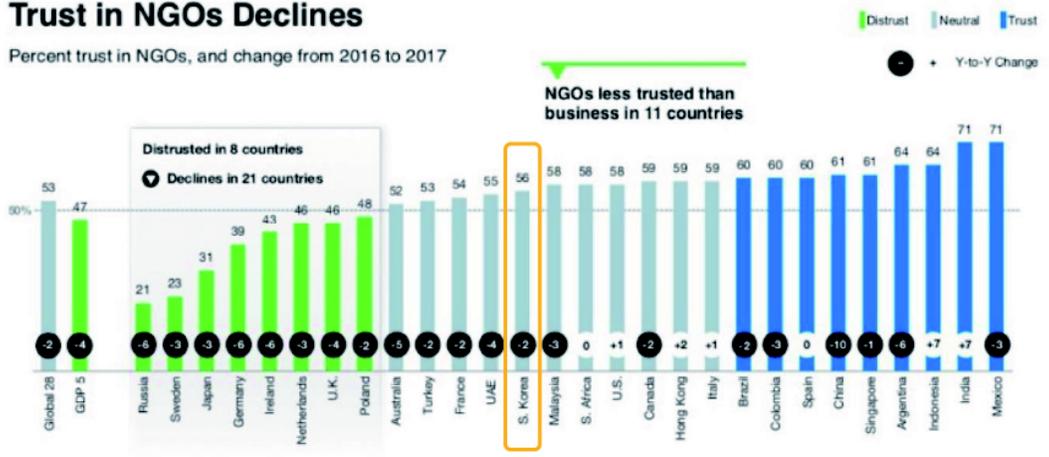
Trust in Government Further Evaporates

Percent trust in government, and change from 2016 to 2017



Trust in NGOs Declines

Percent trust in NGOs, and change from 2016 to 2017



대기업 2년 연속 최상위 노동·시민단체 뒷걸음질 중앙일보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지닌 집단으로 2년 연속 조사됐다. 대부분의 정당과 노동단체는 이번에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김병국)과 공동으로 우리 사회의 24개 파워조직에 대해 실시한 평가조사 결과다. 조사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이며 해마다 계속될 예정이다.

영향력			신뢰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순위	기관	점수									
1	현대차	7.14	1	삼성	7.17	1	현대차	6.89	1	삼성	6.80
2	삼성	6.07	2	현대차	6.04	2	삼성	6.24	2	현대차	6.17
3	SK	6.50	3	한법재판소	6.50	3	SK	6.20	3	SK	6.23
4	한법재판소	6.26	4	SK	6.45	4	LG	5.79	4	한법재판소	6.19
5	LG	6.08	5	대법원	6.21	5	한법재판소	5.77	5	LG	6.07
6	경찰	6.02	6	LG	6.22	6	대법원	5.14	6	대법원	5.76
7	경찰	5.97	7	경찰	6.12	7	경찰	5.14	7	경찰	5.03
8	대법원	5.77	8	경찰	6.11	8	전경련	5.02	8	참여연대	4.98
9	국세청	5.74	9	전경련	5.97	9	국세청	4.87	9	경찰	4.73
10	전경련	5.66	10	국세청	5.77	10	경찰	4.60	10	민변	4.73
11	한나라당	5.21	11	청와대	5.36	11	경수련	4.47	11	경찰원	4.76
12	교총	5.01	12	참여연대	5.28	12	교총	4.77	12	전경련	4.70
13	청와대	4.98	13	경수련	5.20	13	한나라당	4.45	13	전교조	4.70
14	경수련	4.85	14	한나라당	5.12	14	뉴라이프	4.44	14	뉴라이프	4.70
15	한나라당	4.84	15	전교조	5.00	15	참여연대	4.40	15	국세청	4.60
16	참여연대	4.79	16	국정원	4.99	16	민변	4.35	16	교총	4.60
17	뉴라이프	4.75	17	교총	4.98	17	전교조	4.59	17	한나라당	4.56
18	국정원	4.71	18	한국노총	4.69	18	국정원	4.67	18	민주노동당	4.53
19	민변	4.65	19	국민우파	4.63	19	민주당	4.57	19	청와대	4.54
20	한국노총	4.36	20	뉴라이프	4.63	20	민주노동당	4.54	20	한국노총	4.55
21	민주노동	4.31	21	민주노동	4.61	21	청와대	4.53	21	민주노동	4.59
22	민주당	3.90	22	민변	4.75	22	한국노총	4.69	22	국정원	4.06
23	민주노동당	3.88	23	민주노동당	4.65	23	민주노동	3.89	23	국민우파	3.96
24	국민우파	3.55				24	국민우파	3.55			

*표 밑의 법 : 10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20이 조직 순위를 매겼지만, 두 조직의 점수 차이가 0.10점 이하일 경우 동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영향력				신뢰도			
순위	기관	점수	순위 (2011)	순위	기관	점수	순위 (2011)
1	삼성	7.22	1	1	현대자동차	6.16	1
2	현대자동차	6.88	2	2	삼성	6.08	2
3	경찰	6.58	5	3	한법재판소	5.86	4
4	한법재판소	6.57	4	4	SK	5.80	3
5	SK	6.51	3	5	LG	5.74	5
6	경찰	6.33	8	6	대법원	5.33	6
7	국세청	6.31	9	7	금감원	5.26	15
8	청와대	6.22	10	8	경찰	5.10	8
9	LG	6.21	6	9	감사원	5.07	9
10	금감원	6.18	12	10	청와대	5.05	11
11	대법원	6.15	7	11	국세청	4.69	7
12	감사원	6.11	11	12	새누리당	4.49	21
13	새누리당	6.09	14	13	전경련	4.49	10
14	국정원	5.51	15	14	경찰	4.48	14
15	전경련	5.43	13	15	전교조	4.30	20
16	전교조	4.80	16	16	국정원	4.02	13
17	민주당	4.48	17	17	참여연대	3.89	16
18	한국노총	4.40	23	18	경실련	3.88	19
19	경실련	4.22	19	19	한국노총	3.82	23
20	민주노동	4.12	20	20	민주당	3.81	17
21	참여연대	3.95	21	21	민주노동	3.67	22
22	뉴라이프	3.82	24	22	뉴라이프	3.22	25
23	통합진보당	3.52	25	23	통합진보당	3.18	19
24	정의당	2.83	25	24	정의당	2.62	19

※2011년의 경우 통합진보당·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으로 조사

시민단체의 신뢰도와 영향력

- 시민단체 일부 회계부정과 지도자 일부의 정치편향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과거의 신뢰도와 영향력 급감
 - 역대 정부 모두 정권유지라는 협애한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재정보조나 관직제공을 통해 유인함으로써 국내외 정책현안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왜곡해 옴
 - 민주화의 역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과 실행 지지. 협력적 파트너십. 정책 반영, 재정적 안정, 공익 활동
독자성과 운동성, 자율성과 주체성과 도덕성 약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 협력사업.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서 '비판'은 사라지고 '자리'와 '이권' 공유 → "진보정권의 2중대"라는 힐난. 활동가 스스로 "10급 공무원, 순치된 조력자, 사업대행자, 하청업자"로 자아비판
 -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정계진출이나 특정 정당 지지 등 권력친화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시민운동의 공공적 가치 훼손 → 순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
 - 시민단체의 사적 이익집단화, NGO = New Government Office
-

Algocracy

- 오늘의 시대 문명사적 변화의 기로에서 디지털 전환
 - Algocracy: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결합 통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지배. 고도의 감시사회
 -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라기보다 거대 IT기업이 주도하는 알고리즘에 저항하지 않고, 공짜로 주는 디지털 정보에 만족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착한 정보 소비자로 전락함
→ 공론장이 설 수 없다! 사회적 자본도 왜곡된다! NGO 입지가 없다!
 - 알고리즘이 빅보스: 개인 히스토리와 쿠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 디지털 플랫폼: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웹사이트 정보를 상품성 있게 가공. 우리 공짜로 사용하지만 모든 활동 모니터링하고 자료화함 <> Google
-

제목

- 빅테크 대표하는 'GAFAAMT' 5대 미국 기업,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 2개 중국 기업 Alibaba, Tencent
 - 페이스북 29억명, 유튜브 23억명, 인스타그램 12억명, 틱톡 7320만명, 텔레그램 7000만명 사용
 - 이들 정부와 정치인에 로비: 2022년 기준 Amazon 1900만 달러 Facebook 2000만 달러 Google 1200만 달러 Apple 650만 달러
 - 디지털 플랫폼: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도구이자 공간. 그러나 시민들이 소통과 속의 통한 참여가 아님.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빅데이터의 처리 결과에 의존함. 우리 삶이 데이터로 추적 가공되고 있다
 - PEW Research: 일반 시민 30% 사용 소셜미디어 사용 정치사회적 이슈 옹호하거나 지지. 이중 36% 사진 공유, 35% 집합행동 연대하는 단체 정보 검색
 - '아래로부터 감시하는 사회'(sousveillance society) ← surveillance
-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시너지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등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잘 조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 공공의 제도와 신뢰의 문화아래 포용적 사회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
 - 소통과 대화의 문화에 바탕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인한 고용, 성장, 분배, 복지의 선순환
 -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토론-협상-합의 → 협약(pacts) 정치적 합의 중시 사회적 합의 지연
 -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승효과' 창출
 - 에반스(Evans 1997): 사회자본이론 수용 → 국가와 사회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했던 기존 관점에 중대한 수정
 -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멈추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신뢰의 관계에 바탕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서로 보완 가능
 -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국가가 시민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정부는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공공적 책무를 높일 수 있음(Putnam 1993)
-

상보성

- 상승효과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상보성'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배태성' 충족 필요
 - 상보성(complementarity): 공적 행위자와 민간 행위자 사이의 분업관계에 기초한 전통적 관계
정부는 공적행위자로서 민간 행위자들이 제공하는 민간재를 보완하는 공공재를 제공,
공공재와 민간재가 서로 결합하여 더 큰 성과를 낳게 함
 - 배태성(embeddedness): 공사의 경계를 가로질러 시민들과 관료들을 연결시키는 연계(tie)
부패나 지대추구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보다 가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저장소로 작동 가능
 - 국가는 자신이 독점적으로 점유해온 권력과 기능의 일부를 시민사회로 이전시켜야 하고, 시민사회는 국가의 물질적·신분적 특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견지해야 함
-

전환의 시대

-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한국 시민운동
 - 한국: 사적 신뢰는 높으나 공적 신뢰 매우 낮음
→ '나쁜 사회적 자본'이 '좋은 사회적 자본'의 확대와 정착을 억누름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연줄
신뢰의 행동반경이 좁다: 결속력 높고 공격성 강함
 - 윤석열 정부에 들어 '자유민주주의' 이름 아래 '적대적 반국가세력'이라는 논리 갈라치기.
시민사회 진보는 물론 보수도 신뢰X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작동X, 시민사회발전기본법 표류, 공익활동지원센터 중단,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
-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이중적 자율성

-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은 정당정치가 부실한 가운데 대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준(準)정당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참여에 기여하면서도 그 자발성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함
 - 정치권력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사회운동단체들이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역설
 -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이중적 자율성'(dual autonomy)을 지켜야 함:
자유헌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인정하면서 시민성을 통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견제
협력적 갈등
 - 시민사회가 정당이나 국가기구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가 될 때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
 -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의 과도한 정치진출 → 비탄탈성의 원칙 훼손
 - 2004년 경실련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이란 원칙을 마련하여 대표와 사무총장 등이 정치권 진출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윤리강령 만들 →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무엇을 할 것인가

- 한국 사회의 이중전환으로 인한 이중 과제
 - '전근대 → 근대', '근대 → 탈근대'
 - 오래된 쟁점(한반도문제, 부동산조세 등 민생경제문제, 생태-녹색-환경문제, 정치개혁, 재벌개혁)과 새로운 쟁점(검찰개혁, 교육개혁, 공직사회개혁, 부패비리구조 청산)
 - 시민단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부 정책의 공공성, 책임성, 효과성 강화 필요
 - 1 운동성의 회복, 2 디지털 플랫폼 순응에서 응전, 2 자립적 자원동원 메카니즘,
 - 3 풀뿌리 강화통한 아래로부터의 협치, 4 현장 중심 활동, 5 MZ세대 끌어들이기
 - **주인공은 시민이다!** 학습과 실천 통해 공동선 위해 시민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수동적 시민에서 능동적 시민: 시민적 감수성 → civil empowerment
시민단체(actor)는 시민(actor)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듣고 진솔하게 답하면서 온라인 안팎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돕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Thanks !

발 제 2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이희숙 변호사 / 사단법인 시민 이사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2024. 9. 9.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1. 위기의 시민사회?

시민사회/민간단체?

윤석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공약 (연합뉴스, 22. 2. 28.)

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전면 재정비 지시(서울신문, 22. 12. 27.)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1865건 적발...“전액환수” “내년 예산 5000억 삭감”
(경향신문, 23. 6. 4.)

-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
-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 314억 원 부정수급 적발 발표 (0.5%)

: 위반 사례를 보면, 산업협회, 진흥협회, 전략연구원, 문화연합, 주식회사, 재단, 사단,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포함

조사는 민간단체 대상,
비판은 시민단체로 표현

→ 시민단체/시민사회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부정적 인식 강화됨

시민사회 신뢰도

시민단체 신뢰정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5	2.4	2.4	2.4	2.4	2.4	2.4	2.4	2.5	2.4	2.4

기관별 신뢰정도 (2023)

중앙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군대	노동조합단체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	종교기관
2.5	2.0	2.4	2.4	2.5	2.6	2.5	2.5	2.2	2.4	2.5	2.4	2.7	2.8	2.5	2.5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혀 믿지 않는다(1점) 별로 믿지 않는다(2점) 약간 믿는다(3점) 매우 믿는다(4점)

**시민단체 신뢰도, 매년 낮은 신뢰 수준으로 유지 (검찰과 유사)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보다 낮은 수준**

시민사회 신뢰도

기관신뢰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군대	59.6	34.5	47.7	43.8	43.2	45.1	48.0	51.5	56.0	53.8
역로계	58.8	53.2	52.4	56.9	57.9	54.9	62.0	71.7	72.2	76.4
교육계	55.8	52.7	48.8	52.9	55.6	49.6	55.1	65.5	69.1	67.7
금융기관	54.7	51.8	51.4	52.0	51.6	52.2	53.5	58.9	66.2	67.1
시민단체	50.5	48.1	44.9	47.2	46.3	43.6	44.1	46.7	53.4	48.8
TV방송사	48.4	46.9	44.7	46.4	40.9	44.3	38.0	45.1	55.3	56.5
경찰	45.4	40.1	40.1	37.6	40.7	41.2	36.5	46.5	55.3	49.6
신문사	45.1	46.3	42.5	43.9	39.0	39.7	34.2	41.8	50.1	47.8
지방자치단체	44.9	39.9	42.0	41.6	45.4	49.8	44.9	57.1	58.6	58.8
종교계	44.5	46.5	44.8	45.1	40.9	42.7	41.7	45.8	54.1	49.9
노동조합	42.0	38.4	36.7	39.5	38.0	36.5	36.8	43.7	47.8	43.1
법원	41.0	37.6	35.0	29.8	34.3	33.0	36.8	41.0	51.2	47.7
검찰	38.6	36.0	34.3	27.4	31.3	32.2	32.2	36.4	50.1	45.2
중앙정부부처	35.3	32.9	31.9	24.6	40.8	45.3	38.3	49.4	56.0	50.0
대기업	33.6	37.8	33.8	34.3	31.2	33.9	41.4	50.4	56.7	57.6
국회	16.7	18.0	15.3	12.6	15.0	15.0	19.7	21.1	34.4	24.1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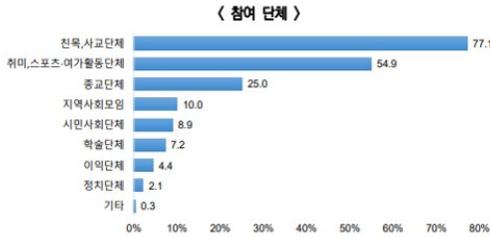
주석: 1) 기관신뢰도는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약간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 긍정적 응답 비율 48.8%로 과반수 미만

시민사회 참여도

2023년 단체 참여 현황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23										
계	참여자	- 친목 및 사교단체	- 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동단체	- 종교단체	- 시민사회단체	- 학술단체	- 이익단체	- 정치단체	- 지역사회모임	- 기타
100.0	64.2	77.1	54.9	25.0	8.9	7.2	4.4	2.1	10.0	0.3

2009										
참여자	- 친목 및 사교단체	- 종교단체	- 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동단체	- 시민사회단체	- 학술단체	- 이익단체	- 정치단체	- 지역사회모임	- 기타	
39.8	77.8	28.9	30.0	12.9	5.1	3.4	0.9		0.5	

(통계청, 참여 단체 복수응답)

(2023 vs 2009) 단체활동 참여율은 24.4% 증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3.5% 감소

시민사회 참여도

(2023 vs 2021) 단체 참여율은 28.4% 증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0.7% 증가

6. 단체 참여 (지난 1년간, 복수응답)

	참여자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 스포츠, 여가활동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Participant	Social meetings	Hobbies, sports and leisure club	Religious organiza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	Academic association	Common interest group	Political group	Local community meeting	Others
<2021>	35.8	61.0	49.4	26.6	8.2	5.6	3.2	1.8	6.8	-
전국 Whole country <2023>	64.2	77.1	54.9	25.0	8.9	7.2	4.4	2.1	10.0	0.3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단체 참여율은 크게 증가되어 회복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

사회단체 활동 정도

사회단체 활동정도(2023년)

특성별(1)	특성별(2)	시민단체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 ▢	▲ ▼ ▢	▲ ▼ ▢	▲ ▼ ▢	▲ ▼ ▢
전체	소계	89.1	4.4	3.2	2.0	1.2
동·읍면부별	도시(동부)	89.4	4.2	3.0	2.1	1.3
	농어촌(읍면부)	87.8	5.5	4.0	1.8	0.8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시민단체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은 1.2%
 소속된 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은 18.7%

2023년 vs 2019년 단체 참여도 증감율

	참여자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증감율 (%)	-2.9	-0.4	16.1	-13	-29.2	-4.8	1.9	21.8	-12.9

(2023년, 2019년 증감율 통계청)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51.5	53.8	53.7	53.0	51.8	46.4	47.7	50.9	58.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 사회단체 참여 현황은 소폭 증가 추세임
- : 취미, 스포츠, 여가활동 증가가 뚜렷함
- :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 정치단체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

사회조사보고의 단체/시민사회단체

1. 친목·사교 단체(계 모임, 동창회 등) - 계 모임, 동창회, 해병대 전우회, 중친회, 재향군인회 등
2.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단체 - 축구회, 산악회, 인라인, 스키, 사진동호회 등
3.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 자비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영성훈련기관, 속회 등
4. 시민 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 YMCA, 환경운동연합, 봉사단체,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경실련 등
5. 학술 단체 - 한국통계학회 등 각종 학술연구, 학술연구지원 관련 사·재단 등
6. 이익 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 노조, 의사회, 약사회, 교원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장애인협회 등
7. 정치 단체 - 정당, 정치인후원모임(노사모, 박사모, 철수산악회) 등
8. 지역 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 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시민사회 정의:

-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 및 시장 사이에 위치한 제도, 조직 및 개인의 영역(Anheier, 2004)
-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자치적·조직적·집합적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영역(OECD, 1997)
- 시민사회를 국가 및 가족,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개인 및 다양한 결사체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공간(박영선, 2019)

- : 현행 법률상 시민사회단체와 그 외 단체를 구분하는 것 불가능함
- : 시민들이 조직한 다양한 단체는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에 포함
- :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를 아우르되, 공익 영역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제도 개선 필요
- : 시민 64%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도 개선으로 추진, 홍보 필요

(참고)호주 자선위원회

자선 목적 단체와 활동의 활성화 지원
자선의 범위 폭넓게 인정

건강 증진 목적

교육 진흥 목적

사회복지 또는 공공복지 증진 목적

종교 진흥 목적

문화 진흥 목적

호주 각종 집단 간 화해

상호 존중 및 관용 증진 목적

인권 증진 또는 보호 목적

호주 또는 호주 공공의 안보 또는 안전 증진 목적

동물의 고통 방지 또는 구호 목적

자연환경 증진 목적

일반 공중에 유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위에 명시한 목적과 유사하거나 그 정신을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 밖의 목적

상기 목적 사항에 대한 법, 정책 등 변경 추진 또는 반대 목적

2. 시민사회 제도개선 활동과 방향

시민사회 정책 연혁

- 군사정부: 시민사회 통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선택적 지원
 - 김대중 정부 이후: 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민관협력 제도화 (국무총리훈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이명박 정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설립,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 박근혜 정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유지
 - 문재인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소셜벤처 법제화
-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안 추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추진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추진
마을공동체기본법안 추진
기부금품법 개정안 추진

공익위원회 설치

- 경과
 - '18 법무부, 현황조사, 해외 사례 연구, 공익위원회 설치TF 구성하여 전부 개정안 마련, 정부 부처 의견 청취
 - '21. 7. 30.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발의
- 개정안 요지
 - 공익목적사업 확대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법무부장관 소속)
 - 시민공익법인 인정제도 (요건을 갖춘 경우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하여 시민공익위원회가 관리감독함)
 - 시민공익법인 지원: 전문인력 육성, 교육, 회계업무 지원,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기부금품 모집 특례: 시민공익위원회에 기부금품 모집등록하도록 하여 감독기구 일원화
- 검토
 - 의의: 시민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됨
 - 한계: 법무부 산하에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된다는 비판, 별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도록 하여 현행 기부금품법 체계를 사실상 따르도록 하였음. 법인 설립과 취소권한은 기존 주무관청에 있으므로 사실상 두 기관의 중복 감독이 우려된다는 비판, 시민공익위원회의 역할 한계
 - 추진 방향: 공익법인법 개정이 아닌 공익위원회 설치법안 제정 추진(국무총리실 산하). 공익위원회가 최대한 다양한 법인(단체)를 지원·감독할 수 있도록 규율 대상 확대, 공익위원회 등록 시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되고 상시 기부금품 모집 가능한 체계 필요, 공익위원회에 비영리단체 제도개선, 공익활동 활성화 역할 부여

민법 비영리법인 규정 개정

- 경과
 - 정부, 2004년, 2011년, 2014년 민법 개정안 발의하였으나 임기만으로 폐기
 - 2017년 정책제안서에 민법 비영리법인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 제안
 - 2021년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은 민법 개정을 전제로 하나, 민법 개정 추진 없이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만 발의됨
 - 2023년 법무부, 민법 전부 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 2014년 정부 민법 개정안 요지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 (제32조)
 - 법인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설립허가 조건의 위반'을 삭제(제38조)
 - 정관 변경 허가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전환 (제42조, 제46조)
 - 정관,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방식을 허용 (제40조, 제43조, 제76조 제2항)
- 개정 방향
 -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법인 설립이나 정관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단체 결사와 활동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고 있음. 설립허가주의 폐기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인가주의로 전환할 것인지 신고만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준칙주의로 전환할 것인지 논의가 있음. 주식회사와 같이 비영리법인도 주무관청의 인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익위원회 등록 요건을 정하고, 등록된 법인에 한하여 세제혜택 등 지원과 감독하는 구조로의 변화 필요.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개혁을 통해 비영리법인을 일반법인과 공익법인으로 나누었는데,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고, 운영은 주무관청의 감독이 아닌 내부 조직에 의해 통제되도록 함. 일반사단 및 일반재단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음
 - 비영리 합병·분할제도 필요, 의사록 서명 방식 허용하는 제도 개선 필요

기부금품법 개정

- 경과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부문화 확산" 추진
 - '18. 10. 4. 정부 관계부처 합동,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이 발표: ① 기부연금제도 도입 ② 기부의 날 지정 및 포상 ③ 모집등록시 신원조회 간소화, 모집완료보고서 제출 생략, 사후등록 및 사후변경등록 허용, ④ 모집비용비율 상향조정(15%→20%(예)) 등록기준금액 요건 완화(1천만원→2천만원 이상(예)), 포괄적 모집 허용 등
 - '21. 1. 행정안전부 의견 반영한 한정애의원 안 발의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기부금 투명성 제고" 추진
 - '23. 5. 11. 행정안전부 의견 반영한 박성민의원 안 발의
 - '24 1. 3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법 개정 요지
 - 명칭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 정의 신설 (공익 목적 한정)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
 - 기부금품 범위 확대 (상장 주식, 전자화폐, 상품권 등)
 - 소속원 → 사원, 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 전용계좌 등록 의무
 - 모집장소 등에 모집자 정보, 모집비용 총당비용, 등록번호 등 게시, 제공의무
 - 기부금품 접수 장소 확대
 - 기부금품 사용 기간 제한 (2년, 연장 가능)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

- 기부금 감독 해외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별도 기부금품법 여부	별도 기부금품법 존재하지 않음	별도 기부금품법 존재하지 않음	별도 기부금품법 존재하지 않음	별도 기부금품법 존재하지 않음
모집등록 여부	사업별 등록x 개별 주(州)의 비영리 법인법 또는 회사법에 따라 등록(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법무장관의 공익신탁 등록소에 등록)	사업별 등록x 공익단체법(charity act 2011) 제30조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공익단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별 등록x 공익위원회법(ACNC Act, part 2-1)에 따라 예외를 제외한 공익단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별 등록x 공익법인 인정(신청하는 경우 공익법인으로 인정)
등록의무자	단체에 한정되며, 개인 제외	단체에 한정되며, 개인 제외	단체에 한정되며, 개인 제외	해당사항 없음
모집등록 기간	해당사항 없음 (첫 등록 후 계속 허용)	해당사항 없음 (첫 등록 후 계속 허용)	해당사항 없음 (첫 등록 후 계속 허용)	해당사항 있음
모집비용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공개토록 함)	해당사항 없음(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공개토록 함)	해당사항 없음(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공개토록 함)	해당사항 없음
기부관리기구	연방자원 : 국세청 주 자원 : 주 법무장관과 FTB	공익위원회	공익비영리위원회(ACNC)	총리대신 or 도도부현 지사 (공익위원회 자문)

(김진우 외, 나눔·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표-2 재구성)

- 한국 기부회원 등 모금(대법원 2023. 2. 2. 2021도16765 판결)
 -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
 - 단체 회원 대상 모금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 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
- 추진방향
 - 단기) 모집비용비율 상향, 등록기준금액 상향, 처벌 규정 완화 등 규제 완화 필요
 - 장기) 공익법인(단체)은 기부금 모금에 대한 별도 등록 체계가 아닌 자유로운 모금 허용하되, 공익위원회, 국세청에서 전체 기부금 수입에 대한 감독 필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제도 개선

- 경과
 - '16. 8. 권미혁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발의 (임기만료 폐기)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제고"
 - '23. 4. 지방보조금법 개정,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강화
 - '23. 6.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 33% 등록 요건 미충족
- 2016년 권미혁 의원안 요지
 -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
 - 국무총리 소속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 설치
 -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확대
 - 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
 - 관할구역별로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방향
 - 비영리스타트업, 풀뿌리 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등록 요건 상시 구성원수 50명 이상으로 완화
 - 장기적으로 보조금 운영비(또는 사업비 내 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 필요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국·공유 재산 활용 시민자산화

- 경과
 -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적
 - '21. 7. 30.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특례 규정 포함
 - '18. 12. 3.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되어 행정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용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포함(시행령 제 13조 제3항).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횡수에 제한 없이 계약 갱신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공유재산을 활용가능
 - '23. 6. 8.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등, 공익법인 기부 자산 취득세, 재산세 등 완화 요구 지속
- 개정 방향
 - 지역의 유휴 부동산을 시민사회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와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할 필요
 -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단체가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공익위원회 등록 단체에 대한 혜택으로 연결될 필요
 - 취득세 납부의 어려움으로 자산을 기부받지 못하거나 재산세 부담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해야하는 사례 있음.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 필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 경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20085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6-24	-	-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의원	2021-03-24	2024-05-29	임기만료폐기
210581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	2020-11-27	2024-05-29	임기만료폐기
2102063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의원	2020-07-16	2024-05-29	임기만료폐기
210005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의원	2020-06-01	2024-05-29	임기만료폐기
2023728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의원	2019-11-12	2020-05-29	임기만료폐기
2019019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	2019-03-07	2020-05-29	임기만료폐기
2002333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원	2016-09-19	2020-05-29	임기만료폐기
191392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의원	2015-02-05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91376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연주의원 등 12인	의원	2015-01-22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7677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은영의원 등 15인	의원	2007-06-05	2008-05-29	임기만료폐기
150785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박명환의원 등 11인 외 50인	의원	1997-10-31	2000-05-29	임기만료폐기

- 한병도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요지
 -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지정
 - 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 경비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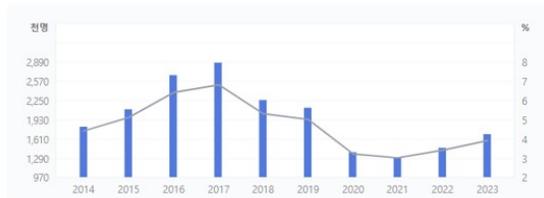
자원봉사 정책 쇄신

• 경과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자원봉사 활성화”
- 2017. 12.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18~’22) 발표
- 2020. 12. 30. 정부 자원봉사기본법 개정안 발의

자원봉사 참여현황

자원봉사참여 성인 인구수 168만 5,636명 23



• 정부 자원봉사기본법 개정안 요지 (임기만료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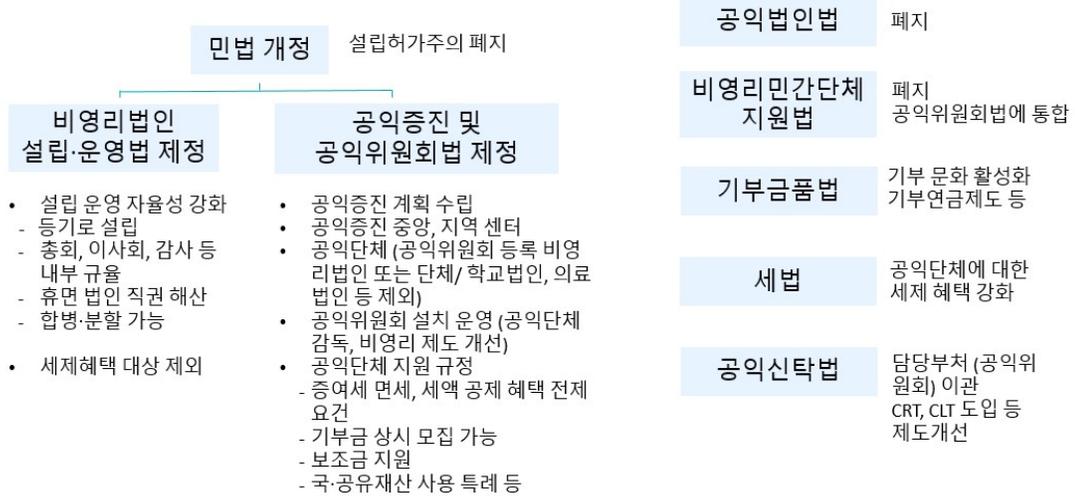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
- 행정안전부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봉협, 한사협, 민간자원봉사 기관 결속...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 개정 및 교육 혁신 촉구(문화뉴스, '24. 3. 11.)

- '자원봉사센터를 투명성과 전문성,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전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한국자원봉사협회의 법적 기능 강화 및 예산 지원, 자원봉사연구소의 법제화, 자원봉사관리사 자격제도의 법제화
- 중고등학교에 '사회봉사' 졸업 필수 과목을 신설

시민사회 법제도 장기 개선 방향

시민사회조직 공익 영역 활성화 지원 체계 강화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자율성 강화(주무관청 제도 폐지)
 공익위원회를 통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Thank You

2024.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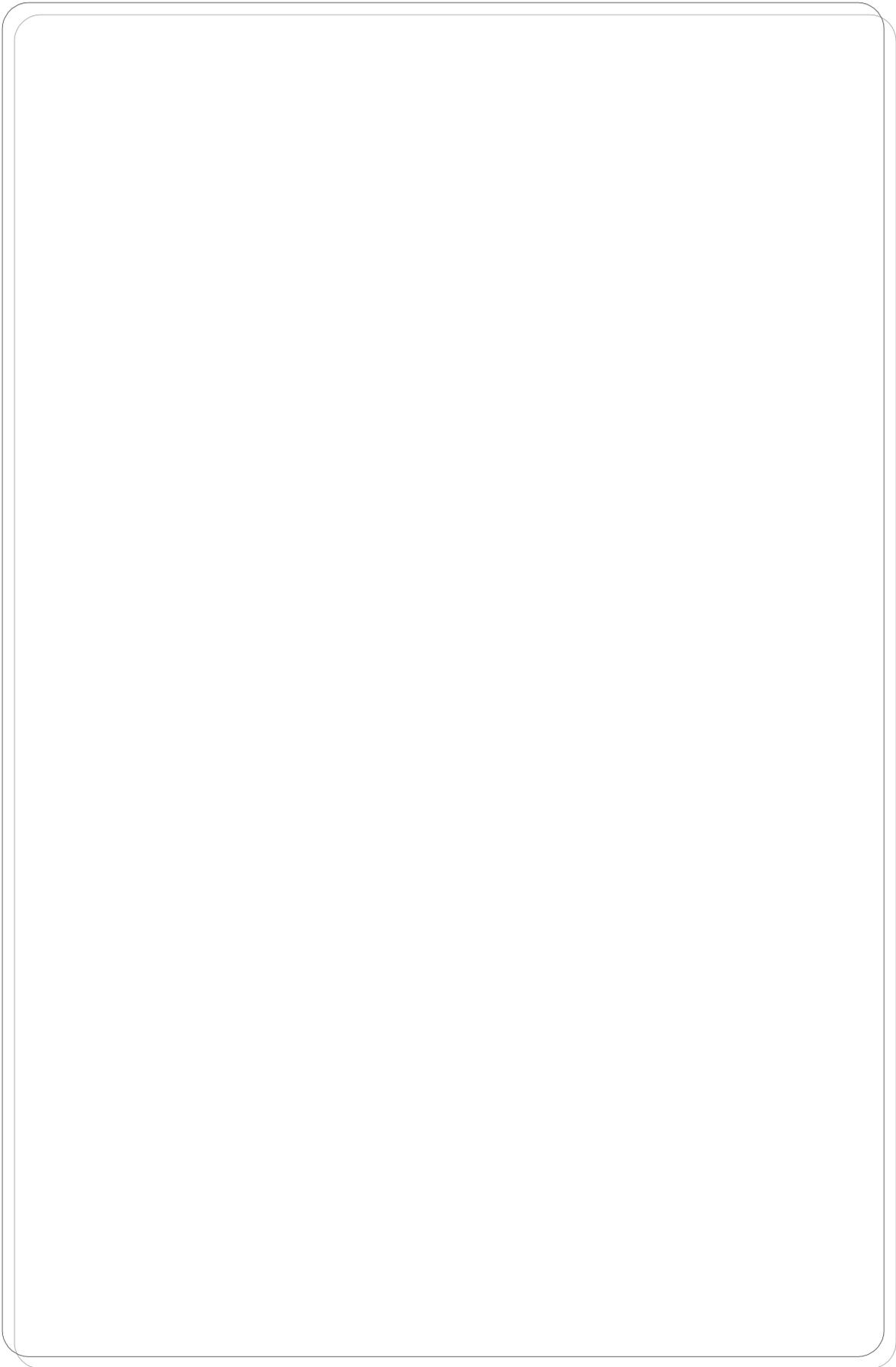
이희숙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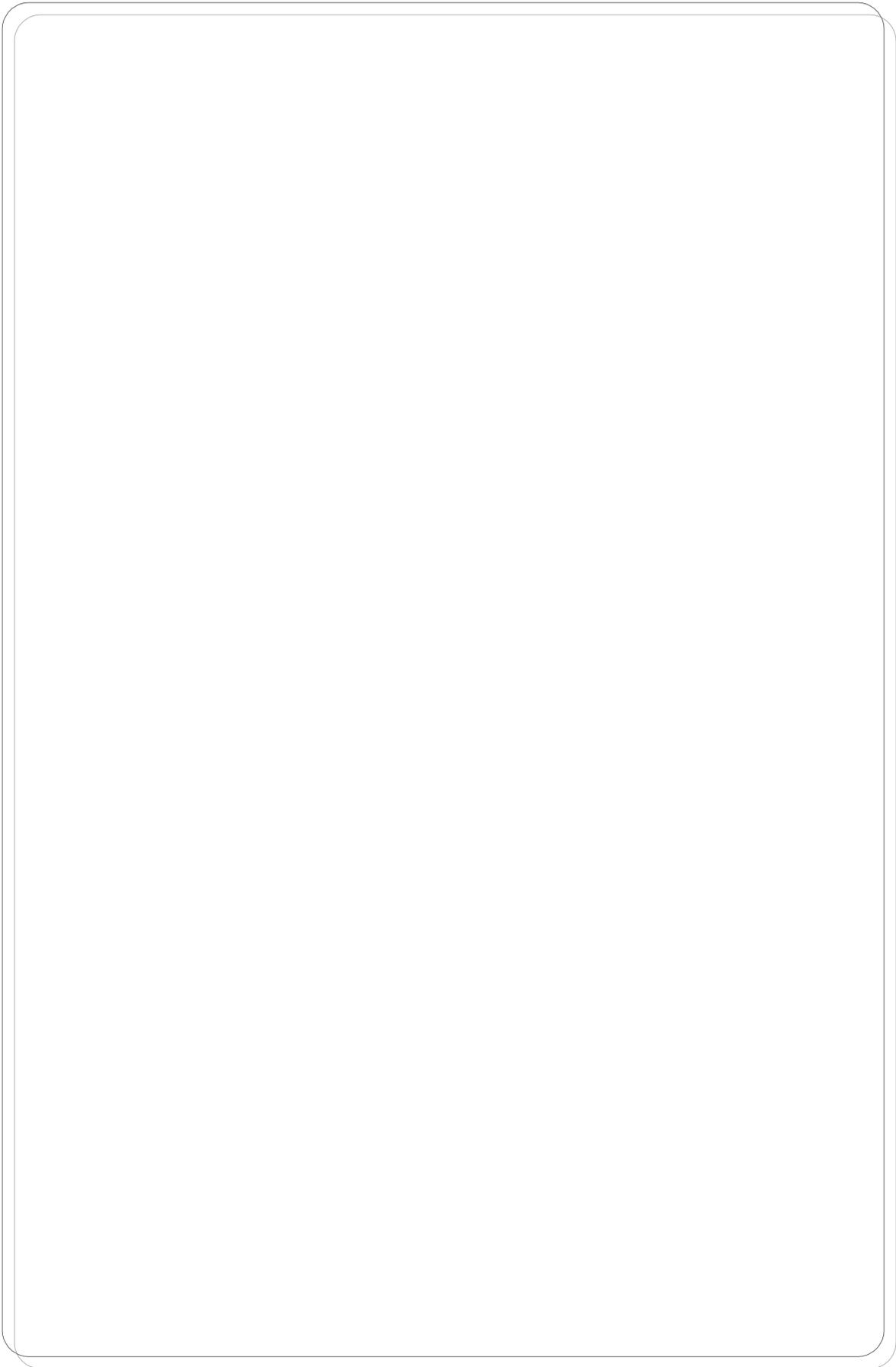
토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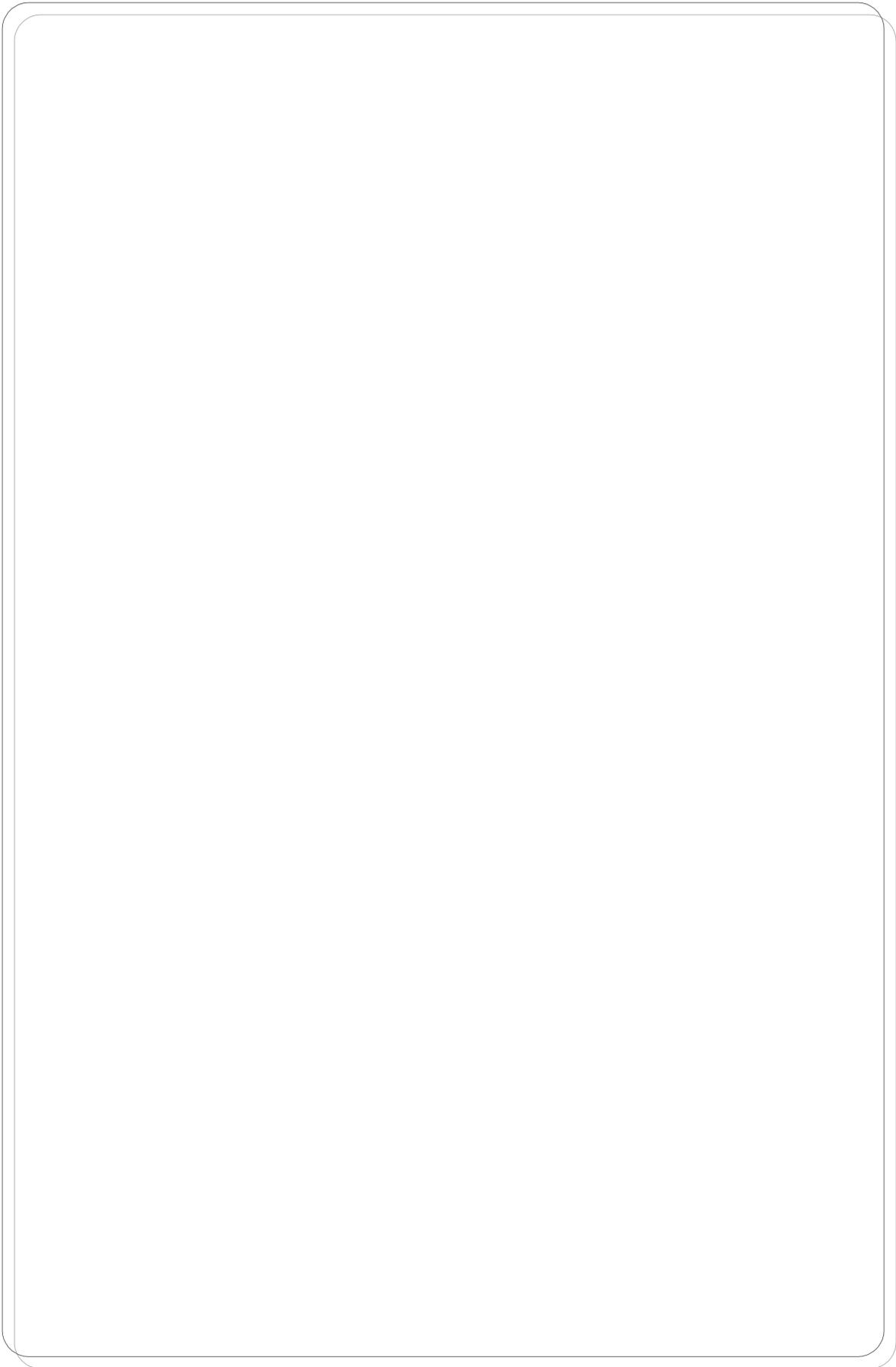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참가자 전원

MEMO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